

광주 온 국토부장관 “호남 SOC 홀대 없다”

〈사회 간접 자본〉

송정역 주차난 해소 방안 검토 KTX호남선 차질 없이 추진 윤장현 시장과 지역 현안 협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 송정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속한 추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광주송정역을 방문해 “광주송정역 활성화와 KTX 호남선은 호남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며 “송정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KTX 호남선이 무안을 거쳐 목표까지 가는 내용의 용역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마무리돼 국회의 결정만 앞두고 있다”며 “예산 지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준비를 다 해둔 상태”라며 “SOC가 소홀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지역 실정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제시 등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아파트 등을 새로 지어 신도시를 건립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살아 숨쉬는 마켓을 연결해 공동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도시공원은 도



송정역시장의 김현미 장관 지난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1913송정역시장을 찾은 김현미(앞줄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민심 탕방을 위해 광주를 방문해 윤장현 광주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과 지역 SOC, 도시재생 등과 관련 대화를 나눴다. <국토교통부 제공>

시가 살아 숨쉬는 역할을 하는 허파와 같은 존재인데 일몰제로 인해 공인들이 사라진다면 회색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1913송정역시장’에서 장을 본 후 광산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1913송정역시장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들었다. ‘1913송정역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간담회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

몰 현상)에 대한 대책을 김 장관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시장 개장 초기 제과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오려 했으나 청년 상인들이 돈을 모아 계약금을 준 뒤 입장을 막았으며, 곧바로 청년상인, 건물주, 광산구,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어 하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긴 김 장관은 박종민 관장으로 부터 광산구의 ‘상상마을 프로젝트’ 설명을 들었다. ‘상상마을 프로젝트’는 주민이 사업 주체로 나서 임대아파트 주거 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광산구 특화 모델이다.

김 장관은 “오늘 방문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다”며 “검토한 후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최승렬기자 srchoi@

민주당, 광주·전남 예산 건의 듣는다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27일 DJ센터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전남도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린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내년 예산을 건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사정 등으로 2차례 연기됐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포함되지 않은 이 지역 SOC 예산을 둘러싸고 ‘호남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이개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도 실국장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참석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 공약 세

부과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및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민주당의 가이드라인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반영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와 삭감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 정치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최근 때어난 ‘호남 SOC 예산 홀대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당 핵심이 총 출동해 호남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5일과 15일 열릴 예정됐던 민주당과 시·도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난 15일은 김병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전남연구원 올해부터 시의회 감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대상 103개 기관으로 확대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을 기존 87개에서 103개 기관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25억원을 출연받은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올해 처음으로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14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거나 시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했다. 추가된 곳은 광주전남연구원·광주시자원봉사센터·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더좋은자치연구소·시립장애인복지관·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복지타운·시립제1요양병원 등이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로당광역지원센터·광주교통문화연수원·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주관광객센터·광주시관광협회 등 모두 14곳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산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도 그동안 시의회 사무감사에서 제외됐던 복지사업 관련 기관·법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환자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샀던 시립제1요양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기관들도 앞으로 매년 시의회 감사를 받게 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도의회와 번갈아 가며 윤번제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다. 올해는 광주시의회가 맡았다.

이들 14개 기관·법인에는 1곳당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59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총 2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87개에서 103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15일 이들 기관·법인을 포함해 시정 본청과 직속 산하기관·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택 광주시의원, 시 문화자원 발굴 조례 발의

광주 시민이 건축물과 예술작품 등을 발굴해 이를 관광, 도시재생,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된다.

임택(민·동구1·사진)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보유의 문화자원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활용하도록 한



있는 자원을 ‘광주 문화자원’으로 선정하도록 광주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시장이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누구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원을 ‘광주 문화자원’으로 선정하도록 광주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실제처럼...한빛원전 방사능 사고 대피 훈련

내일 영광·광주·무안 등서

영광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이 26일 열린다. 한빛 3호기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훈련이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한빛원전과 영광, 무안, 함평, 장성, 고창, 부안에서 민·관·군·경 등 77개 전문기관과 주민·학생 등 4000여명이 참여하는 ‘2017 한빛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린다.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따른 한빛 3호기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피해영향평가에 따른 단계별 주민 보호조치 행동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재기관 간 대응 협력체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주민 대피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인 원전 반경 5km 내 홍농읍 주민과 학생 등 7400여명이며, 사태 확산에 따라 긴급보

호조치계획구역인 30km 내 영광·무안·함평·장성의 9개 읍·면 주민 7만1000여명이 2차 대피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원전 반경 5km 내 홍농읍 주민 200명과 홍농중 등 3개 학교 학생 580명이 1차 대피하고, 30km 내 영광·장성 주민 등 750명이 2차로 실제 대피한다.

주민 대피장소인 구호소에서는 대피 주민의 등록 절차, 후송차량 및 소개 주민 오염검사와 제염 실시, 비상 발생 시 주민 행동 요령 안내, 방재장비 활용법 소개, 방사선 영향상담소 운영 등이 이뤄진다.

전남대병원 등 18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지역 보건소는 한국원자력학원과 함께 비상진료소, 응급의료소 등을 운영한다.

육상, 해상, 공중에서 심각한 파악한 환경방사선 탐사 조사결과를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로 전송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는 훈련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추석 때 결식 우려 아동 끼니 챙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끼니를 굶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정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휴업에 대비해 아동급식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결식 우려 아동 2904명을 대상으로

대체식품 및 식품권 제공업체 11곳과 일반음식점 454곳을 추석 연휴 아동급식업소로 지정해 아동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에 급식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식권과 식품권 배부, 아동급식 지정 업소의 장소와 영업일 안내와 함께 각 가정에 대체식품을 배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8·2 부동산 대책이후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전망!

혼돈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보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10월 2일(월) /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의도동 25-11 유수홀딩스(한진해운)빌딩 5층 / 1층 우리은행건물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 100m 직진 후 좌회전 100m 우측)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당일 특별 무료상당 진행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KLD) 한국토지개발원

D&M 카페 "한국토지개발원 토지의 신"에 가입해서 부동산정보교류 함께해요

TALK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